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시, 민원인 보호조치 강화

민간계약 근로자·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엄격히 제한·대응
일반 민원도 공익 신고 처리 가능
신고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 최소화
민원실 내 CCTV 녹음·조작 금지

서울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19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은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기가 됐고, 2021년엔 수원시 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흘려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소가 노출돼 송파구에서 살인사건이 터졌다. 2022년엔 직위 해제된 피의자가 회사 내부망에서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 범죄를 저지른 신당역 스톱킹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22년 9월 20일 오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 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재발 방지 및 안전 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행정업무 관련자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 ▲신고성 민원에 대한 신고자 보호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관리·운영 강화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나선다.

우선 시는 민간계약 근로자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계약근로자나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자정부법에 의해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일반 민원도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공익 신고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민원인(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과 피신고기관에

전달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 등 유추 가능 사항을 삭제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나 고소·고발성 제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유로 전환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도 철저히 한다. 민원 관련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반드시 권한이 있는 자만 사용토록 조치한다. 민원실 내 CCTV 운영시 안내판을 걸고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을 금지한다. 민원실에 문서와 쓰레기를 설치하고 유출 위험 안내문을 부착해 버려진 민원서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업무 공무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한다. 각 기관(부서)은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는 민원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개별 법령 근거 없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글·사진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악성민원, 형사 처벌한다”... 교권보호 4대 법안, 교육청 통과

교권회복·보호입법화 지원 회의
교원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확대 등

서울 서이초 2년차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민원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여당 간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 제공

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4일 교육위를 통과할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은 확대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판단한다.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혐의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하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종합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초·중·고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교원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학교별로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lhj@

‘킬러문항’ 없어진 모의평가... 47.5만명 응시 예정

재수생 등 졸업생, 10.4만명
응시자, 전년비 총 1.3만명 감소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처음 반영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오는 6일 오전 8시40분부터 실시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전국 2139개 고등학교와 485개가 학원 등에서 총 47만5825명이 9월 모의평가를 치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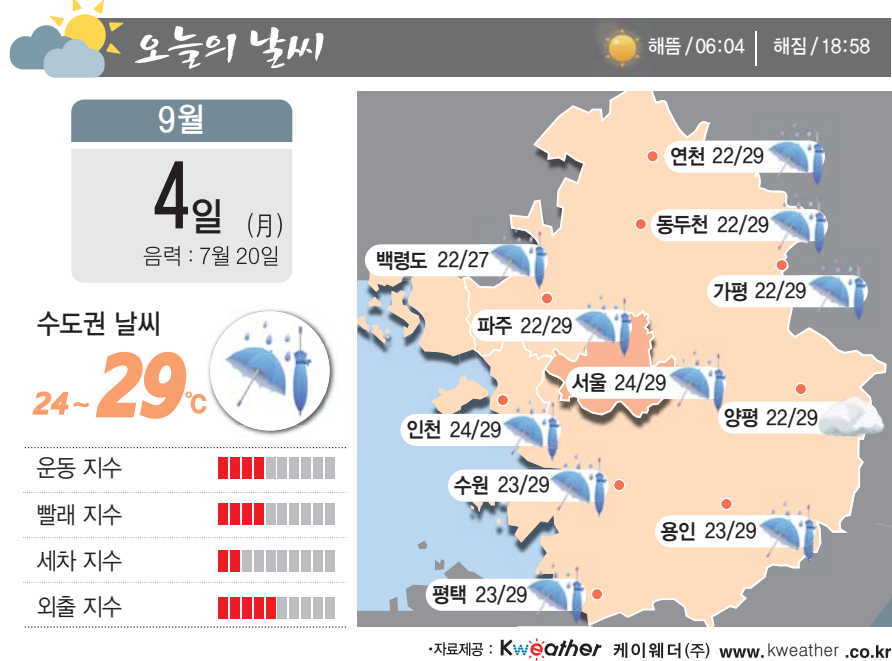
이중 고3 재학생은 37만1448명, 재수생 등 졸업생은 10만4377명이다. 총 지원자 수는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1만2150명 늘었다. 재학생은 3927명 줄었지만 졸업생이 1만6077명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1만3545명이 감소했다. 이중 재학생은 2만5671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만2126명이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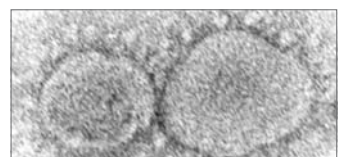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08:40~

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17:45)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돌연변이 36개’ 코로나 새 변이 미국 확산 조짐...5개째 확인 /사진 뉴시스
▲트럼프,美공화 대선 59% 압도적 1위...“사법리스크가 지지층 결집”

▲‘젤렌스키 후원자’ 콜로모이스키 사기 혐의 체포...‘부패척결’ 속도
▲中왕이 “우크라이나 위기 재발해선 안 돼”...남중국해 평화 저해 세력 비판



▲바이든, ‘이탈리아’ 강타 플로리다 피해 점검...디센티스와 만남 불발 가능성
▲“유엔, 곡물협정 재개 위해 러 은행·자산 제재 일부 해제 제안”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